

원자력안전규제의 법이론체계 분석 The Theorization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and Legal System

김상원, 장군현, 오병주, 강석철, 이종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요 약

원자력안전규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이해는 규제행정 관련 법체계, 규제행정의 종류 및 효과 등 규제행정법의 이론체계의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 분석에서는 먼저 원자력안전규제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어 행정규제기본법 기본 정신을 분석하며, 다음으로 원자력안전규제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또는 기속재량행위) 및 부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어, 원자력법령의 종적 체계를 분석하여 법, 대통령령, 과학기술부령 및 장관고시와 규제기관의 규제지침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규제로는 미원자력위원회(NRC)가 도출한 규제 5원칙(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의 내용을 살펴보고, 안전규제종사자의 업무자세로서 법률에 의한 한계의 인식, 규제기술력과 양심에 따른 권위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었다.

원전 표준설계 인가제도 개발

Development of Standard Design Licensing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s

이상규1), 윤영길1), 김용식1), 이재훈1), 백민2)

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2)과학기술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요 약

현재 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신형경수로 1400은 표준설계 개념에 입각하여 동일한 설계로 반복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설계를 채택하는 원전의 인 허가 시에 표준설계 부분에 대한 중복심사를 배제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설계 원전에 대한 신규 인 허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표준설계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인 허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술보고에서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표준설계 인 허가 제도의 절차요건과 서류요건을 소개하였다.